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문제점 (IV)

- 변리사 시험제도의 문제점 -

최 덕 규*

I 머리말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¹⁾ 그리고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하여야 한다.²⁾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면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규정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다. 국가에서 특정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비단 변호사나 변리사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자격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특정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우리의 변리사 자격제도는 우리 사회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일면이 아닐 수 없다.

변호사가 아니라면 변리사시험을 통하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변리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³⁾

1차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그리고 영어 모두 4과목이다.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비롯하여 이들과 관련된 국제조약을 포함한다. 국제조약으로는 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조약, 부다페스트조약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모두 가입한 조약들이다. 민법개론은 친족편과 상속편을 제외한 물권과 채권에 관한 부분이다. 자연과학개론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포함한다. 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지-텔프, 텡스 또는 플렉스로 대체한다. 영어시험은 일정 기준점수를 맞게 되면 통과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1차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3과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당락을 결정한다.

1차시험에 합격하면 2차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2차시험은 필수과목인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각자 하나씩 선택한 선택과목을 합하여 모두 4과목을

* 변리사, 명지특허법률사무소

1) 변리사법 제2조

2) 변리사법 제3조

3) 변리사법 제4조의2 제2항

치른다. 선택과목에는 모두 19과목⁴⁾이 있는데 응시자는 각각 하나의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1차시험과 2차시험을 치르는 자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과목을 모두 치르지 않고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자들이 있다. 바로 특허청소속 공무원들이다.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1차시험이 면제된다.⁵⁾ 그들은 2차시험 4과목만 치르면 된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1차시험이 면제됨과 동시에 2차시험에서 각자가 선택한 하나의 필수과목과 하나의 선택과목 모두 2과목만 치르면 된다.⁶⁾ 병원에서 병원행정사무를 5년이나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간호사 자격이나 의사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면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소속 공무원들이 1차시험을 면제받고, 2차시험에서 2과목만 치르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의 3 및 그에 관한 부칙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은 현재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시험과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변리사 시험의 문제점

1. 1차시험의 문제점

(1) 자연과학개론의 문제점

영어시험을 제외하면 자연과학개론은 산업재산권법 및 민법개론과 함께 변리사 1차시험의 3과목 중의 하나이다. 자연과학개론은 1차시험에서 1/3을 차지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다. 자연과학개론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이루어지는데, 응시자가 공부해야 하는 분량을 보더라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문제는 이 과목의 필요성이다. 변리사로서 일하기 위해서 물리, 화학, 생물,

4)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5) 변리사법 제4조의 3 제1항

6) 변리사법 제4조의 3 제2항 및 부칙 별표 1

지구과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개론을 그렇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 변리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공계 과목의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리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공계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 그것은 바로 전기·전자분야, 화학·화공분야, 기계·기구분야, 그리고 생화학·유전공학분야이다. 정상적인 변리사라 한다면 이들 4가지 분야 중에서 어느 한 분야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2개 이상 분야의 지식을 갖춘다면 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3개 분야 또는 4개 분야 모두의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친 욕망에 불과할 뿐이다. 정형외과도 할 수 있고 내과도 할 수 있고 안과도 할 수 있고 치과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를 훌륭한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

변리사로서 필요한 전기·전자분야, 화학·화공분야, 기계·기구분야, 또는 생화학·유전공학분야의 지식은 최소한 대학이나 그에 상응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포함한 자연과학개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개론을 공부해서 변리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분야의 대학이나 그에 상응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학습 없이 전기·전자분야, 화학·화공분야, 기계·기구분야, 또는 생화학·유전공학분야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행 1차시험의 자연과학개론은 변리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의 습득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과목으로 오히려 응시자로 하여금 과중한 부담만을 주고 있다. 불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연과학개론은 법학을 비롯한 인문분야 전공자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변리사 제도는 특허업무만을 전담하는 특허변리사와 상표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표변리사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변리사는 특허업무는 물론 상표업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상표업무는 기술과 관련된 이공계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학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과 상표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만 있으면 기술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이도 상표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더라도 변리사 업무 중에서 약 70~80%가 특허업무이고 20~30%가 상표업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최소한 변리사 중에서 20~30%는 상표업무를 전담할 변리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율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공계의 특허변리사가 상표업무를 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지만, 특허업무를 전기·전자분야, 화학·화공분야, 기계·기구분야, 생화학·유전공학분야 4개 분야로 구분할 때 상표분야는 또다른 전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

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개론은 법학을 비롯한 인문분야 전공자들이 이공계 지식이 전혀 필요없는 상표변리사로의 진입을 가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법학을 비롯한 인문분야 전공자들이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변리사가 되지마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설사 그들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공부해서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지식만으로 전기·전자분야, 화학·화공분야, 기계·기구분야, 또는 생화학·유전공학분야의 특허업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변리사 1차시험에서의 자연과학개론은 특허업무를 주로 하는 특허변리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시험을 위한 시험과목에 불과하며, 상표업무를 주로 하는 상표변리사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오히려 인문분야 전공자들이 상표변리사로서의 진입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2) 산업재산권법과 민법개론의 문제점

영어시험을 제외하면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치러진다. 이들이 각각 1/3 즉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의도대로 자연과학개론이 1차 시험과목에서 제외된다면 산업재산권법과 민법개론은 각각 5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변리사로서 일을 할 때 민법개론이 5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비롯하여 이들과 관련된 국제조약을 포함한다. 국제조약으로는 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조약, 부다페스트조약 등이 있는데 이들 조약들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 한데도 산업재산권법과 민법개론 각각 한 과목으로 취급하여 동일하게 100점 만점으로 한다는 것은 변리사가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변리사에게 중요한 것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산권법이지 민법개론이 아니다. 물론 민법이 전혀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재산권법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법 중에서는 특허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이 상표법이며,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은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하는 특허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과목을 분류하고 분류된 과목별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현행의 1차시험은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도록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수험생에게 어떤 제시도 할 수 없는 시

험이라 할 수 있다.

2. 2차시험의 문제점

(1) 선택과목의 문제점

2차시험은 필수과목인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각자 하나씩 선택한 선택과목을 합하여 모두 4과목을 치르게 된다. 필수과목인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은 누구나 치러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선택과목은 19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선택과목은 2개의 법과목인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그리고 산업디자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16과목은 서로 학문분야가 다른 이공계 과목이다.

시험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중에서 우수자 내지는 일정 요건 이상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시험으로 그러한 시험은 시험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그러한 시험은 그저 운이나 바라는 요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9개 과목 중에서 선택한 하나의 선택과목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전기자기학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해서 변리사가 되었다면 그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전기·전자분야의 특허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학이나 관련교육기관에서 전기·전자분야의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전기·전자분야의 특허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도 없고 또한 서로 다른 과목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2차시험은 변리사 시험제도에서 최악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일본과 우리 밖에 없다. 우리의 2차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은 일본 변리사 시험과 아주 흡사하다.⁷⁾

선택과목은 필수과목인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그 성격이 다르다. 필수과목인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은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변리사가 꼭 알아야 할 과목이다. 물론 변리사는 전기·전자분야, 화학·화공분야, 기계·기구분야, 생화학·유전공학분야 중에서 어느 한 분야의 지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과목이 평가과목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과목만을 평가하여 전문지식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러한 지식은 대학이나 관련교

7) 일본 변리사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3조

육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습득되는 것이지 한 과목의 시험공부에 의하여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필수과목의 문제점

2차시험의 필수과목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이다. 이들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치러진다. 변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이 특허법이나 상표법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허법이나 상표법이 동등한 정도로 중요하다고도 할 수 없다. 법조문 수에 따른 물리적인 양을 보더라도 특허법은 23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지고 상표법은 9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다. 조약을 보더라도 특허법은 파리조약과 특허협력조약을 비롯하여 부다페스트 조약 등을 포함하고, 상표법은 마드리드 조약과 니스분류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업무량을 보더라도 약 70~80%가 특허업무이고 20~30%가 상표업무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복잡하며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2차시험의 필수과목인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은 모두 획일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치러진다. 이러한 시험규정은 변리사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잘못된 규정이며, 그 결과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는 학습방향을 설정 해주지도 못하고 있다.

3. 시험 내용상의 문제점

변리사법에 의하면 1차 및 2차시험에 합격하면 변리사 자격을 갖는다.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는다든 것은 변리사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변리사로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변리사 자격이 주어져도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스스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자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일까? 한마디로 시험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그러한 능력을 시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리사 시험은 그렇지 못하다. 현실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문제를 위한 문제로써 시험을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진다. 5지 선다형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의 문제 내용을 살펴보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거리가 먼 문제들이 상당수 있다.

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치러진다. 가상의 사건을 문제로 주고 이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답을 하도록 하는 케이스 문제와 특정의 논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의 문제로 치러진다. 케이스 문제에서 제시되는 가상의 사건들도 자세히 보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케이스와는 거리가 멀다. 문제를 위한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은 특정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응시자로 하여금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변리사 1차 및 2차시험은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험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III 시험의 필수요건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은 공정해야 하고 그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출제해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토록 하는 소정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변리사 시험은 1, 2차 모두 공정하지도 못하고 또한 안내자 역할을 하지도 못한다.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해서 높은 점수만으로 선발하는 2차시험은 바로 공정하지 못한 시험임을 대변하는 것이며, 실제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1차시험의 자연과학개론이나 획일적인 점수체계 그리고 문제를 위한 문제 등은 한 전문직업인의 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변리사 시험의 개선을 위한 제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의 변리사 1, 2차시험은 시험과목이나 과목별 배점을 비롯하여 내용적으로는 변리사 업무 수행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2차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요행이나 선택의 운에 의하여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시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본다.

1. 1차시험의 개선을 위한 제안

(1) 자연과학개론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허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는 전기·전자분야, 화학·화공분야, 기계·기구분야, 생화학·유전공학분야 중에서 어느 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은 대학이나 관련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습득되는 것이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개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공학 각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지식 없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개론에서 고득점을 취득했다고 해서 특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연과학개론은 전혀 불필요한 과목이고, 응시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부담만을 주고 있다.

자연과학개론을 폐지하면 1차시험은 산업재산권과 민법개론만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공계가 아닌 법학이나 인문학을 전공한 지원자가 대거 합격할 수 있다. 이 또한 변리사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한다. 변호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리사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가 이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특허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변리사⁸⁾ 시험에서는 이공계 학위 소지자만이 변리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변리사제도의 취지와 합목적성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연과학개론을 폐지하는 대신 이공계 학위 소지자만이 변리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과학개론을 폐지하는 대신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전공분야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자연과학개론을 폐지하는 대신 (1) 전기·전자분야, (2) 화학·화공분야, (3) 기계·기구분야, (4) 생화학·유전공학분야로 구분하여 이들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고, 법학을 비롯한 인문학 전공자를 위하여 (5) 법학·인문분야를 추가해야 한다. 결국 5 분야 중에서 1분야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5분야는 각 전공분야에서 최소한 4년제 대학 수료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정도로 출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 5분야는 60점 이상 취득자를 “PASS”로 간주하고 그 점수는 다른 과목(산업재산권법 및 민법개론)의 점수와 합산하지 말아야 한다.

8) 미국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patent agent를 의미함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커트라인 60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합격률로 “PASS”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전기·전자분야의 문제가 어려워 채점결과 60점 이상자가 거의 없었다면 이 경우 전기·전자분야를 선택한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위 40%를 “PASS” 시키도록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각 분야별로 30 또는 40%와 같이 순위비율에 따라 “PASS”를 결정한다면 문제의 난이도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아주 공정한 방법이며 어떤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공계 분야인 전기·전자분야, 화학·화공분야, 기계·기구분야, 생화학·유전공학분야를 선택한 응시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기사1급 자격증으로 이 과목 시험을 면제토록 해주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사1급 정도의 자격이라면 4년제 대학이나 관련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통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은 이공계의 전문지식과 산업재산권법에 관한 지식이다. 이공계의 전문지식이 없는 자에게 변리사 자격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물론 상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표변리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공계의 전문지식을 갖추었다면 변리사에게 그다음 필요한 것은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지식인데, 이는 이공계의 전문지식보다 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다. 변리사가 갖추어야 할 이공계의 전문지식은 4년제 대학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 산업재산권법과 민법개론의 배점은 조정되어야 한다.

위의 개선안대로 한다면 자연과학개론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변리사제도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응시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도 주지 않게 되고, 법학을 비롯한 인문계 전공자도 응시의 폭을 넓혀 상표변리사로서의 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개선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산업재산권과 민법개론의 배점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이들이 현재로서는 100점씩 배점되지만 이로써는 불합리하다.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를 생각한다면 그 불합리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민법개론이 100점이라면 산업재산권은 최소한 300점 내지 400점 정도가 되어야 한다. 산업재산권이 300점이라면, 특허법은 200점, 상표법은 100점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조약을 포함한다. 산업재산권이 400점이라면, 특허

법은 250점, 상표법은 100점, 디자인보호법은 50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2차시험의 개선을 위한 제안

(1) 선택과목은 폐지되어야 한다.

1차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을 폐지하는 대신 (1) 전기·전자분야, (2) 화학·화공분야, (3) 기계·기구분야, (4) 생화학·유전공학분야, (5) 법학·인문분야로 구분하여 한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들을 “PASS”로 결정토록 한다면, 2차시험의 선택과목은 폐지되어도 좋다.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은 소정의 대학과정이나 관련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지만 한 과목의 시험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이 폐지되어야 변리사시험은 비로소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다.

현재 19개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게 되면 시험주관기관의 업무량도 훨씬 가볍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과목의 시험에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쏟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 한다. 시험주관기관은 보다 양질의 문제를 출제하는데 정력을 쏟아야 한다.

(2)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의 배점은 조정되어야 한다.

위의 개선안대로 한다면 2차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3과목을 치르게 된다. 이들은 현재로서는 100점씩 배점되지만 이로써는 불합리하며 변리사가 필요한 지식을 갖추도록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이 100점이라면 특허법은 400점 상표법은 200점 정도가 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이 50점이라면 특허법은 200점 상표법은 100점 정도가 되어야 한다. 변리사에게 상표법은 민사소송법보다 더 중요하며 특허법은 상표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3) 특허법과 상표법 문제는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변리사 시험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우리의 시험문제는 1차, 2차를 막론하고 질적으로 더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문제를 위한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된다.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

2차시험에서의 주관식 문제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주관식 문제라고 해서 출제자의 주관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주관식 문제는 차라리 객관식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낫다. 객관식 문제라고 해서 주관식 문제보다 어렵지 않고 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현행의 시험제도처럼, 출제자, 선정자, 채점자가 각각 다른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무리 시험의 공정성을 기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시험의 일관성을 해쳐 양질의 출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정한 평가 또한 쉽지 않다.

V 결 어

결론적으로, 1차시험에서의 자연과학개론을 폐지하고, 대신 (1) 전기·전자분야, (2) 화학·화공분야, (3) 기계·기구분야, (4) 생화학·유전공학분야, (5) 법학·인문분야로 구분하여 이들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고, 이 과목은 60점 이상 취득자를 “PASS”로 간주하고 그 점수는 다른 과목(산업재산권법 및 민법개론)의 점수와 합산하지 말아야 한다. 민법개론이 100점이라면 산업재산권은 최소한 300점 내지 400점 정도가 되어야 한다.

2차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은 무조건 폐지하여야 한다. 2차시험의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의 점수배점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한 예로, 민사소송법이 50점이라면 특허법은 200점 상표법은 100점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험문제는 1차, 2차를 막론하고 질적으로 더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문제를 위한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된다.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

Key Words:

변리사시험, 선택과목, 필수과목, 자연과학개론, 시험의 공정성, 시험의 일관성

patent bar examination, optional course, required course, common science, fairness of examination, consistency of examination

Abstract

A Review Regarding Problems on Korean Patent System (IV)

--- In regard to Patent Bar Examination ---

Dukkyu Choi

Korean Patent Bar Examination consists of a preliminary multiple choice type test for three courses, intellectual property law, civil law, and common science course, and a final essay type test for four courses, patent law, trademark law, civil procedure, and an optional subject.

In the preliminary test, the common science course should be dropped out from the courses. Instead, an optional course should be selected among five fields, (1) Electric and electronic engineering, (2) Chemistry and chemical engineering, (3) Mechanical engineering, (4) Biochemical and genetic engineering, and (5)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 including legal background. This optional course should be assessed as "PASS" or "NON-PASS." If the preliminary test has two cours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civil law, the points of the courses should be adjusted. As an example, in case that civil law assigns 100 points, intellectual property law will be preferably assigned 300 or 400 points.

In the final essay type test, the optional subject should be dropped out from the courses. If the final test has three courses of patent law, trademark law, and civil procedure, the points of the courses should be reassigned. As an example, in case that civil procedure assigns 50 points, patent law will be preferably assigned 200 points and trademark law 100 points.

Finally, the questions of the preliminary test and the final test should be

qualitatively improved. The questions should be made to test the ability to practice as patent attorney. The questions for question should be avoided.